SUMMA
Seoyoung Industrial Development / Seoyoung Engineering

경기신문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단기 4357년 (음력 3월 18일)
kgnews.co.kr
대표전화 031)2688-114 제5700호

적금처럼 내집마련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제14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팡파르'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에서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개회식에서 1군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대회 표지판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옥지훈 기자

김동연 "도내 저출생 위기 해결에 단초 만들고 싶다"

경기도,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 개최

'시즌 2: 러브아이' 추진 계획 발표
가족친화 조직문화 5대 정책 제안
직장 내 확산 위해 인센티브 확대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8차 회의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 시즌 2: 러브아이'의 시작을 알리며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확대·강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0.5&0.7잡 ▲4·6·1 육아응원 근무제 등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제도의 인증을 동기 부여하기 위해 항목평가 점수를 늘리고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49종에서 57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저리융자(기업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고 경기도 홍보대사, 잡아바 등을 활용한 기업 홍보 콘텐츠를 제작·제공한다.

아울러 재인증 기업을 위한 지원금도 신설해 40개 사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액 감면 등 지방세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내 1년 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남성 휴직자로, 금액과 지급기간 등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선택형 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0.5&0.75잡' 제도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의 최대 이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시간선택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근태시스템 도입비, 대행업무수당,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임신직원의 모성보호와 육아·돌봄을 통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1일 6시간 근무·주 1일 재택근무 등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 실현을 위한 업무 대행자에 인센티브 부여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으로 사내 분위기 확산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과 함께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리는 경기: 낙낙(樂樂, KnockKnock)'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가족숲 놀이터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가족도자체험 운영 ▲가족단위 문화예술 공연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다둥이 가족 캠켓팅(캠핑+티켓팅) 탈출기 등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 등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만이라도 이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들고 싶다. 위원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 기자

"매일 세탁하는 것도 부담" 뿔난 학부모 지갑만 '탈탈'

학교주관구매제 시행 10년 ②

구매제도 기반은 '무상교복 지원금'
현물 지급 원칙에 품목들도 정해져
필요한 품목들 '추가 구매' 불가피
학부모들 현금 지급으로 변경 원해
개별비용 낭비 지적, 선택권 넓혀야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이 원칙이다. 때문에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교복 품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지정된 업체에서 교복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교복을 한두 달 입다보면 불만은 쌓여만 간다. 재킷, 조끼 등 입지 않는 교복이 옷장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한 벌뿐인 셔츠, 체육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세탁 수고를 덜기 위해 셔츠, 체육복을 추가 구매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격 대비 품질은 형편없다. 체육복도 상·하의를 별도 구매할 수도 없다. 무조건 세트로 구매해야 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기반은 '무상교복 지원금'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도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2015년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도입 이후 학생 1명당 동·하복 각 한 세트, 총 10벌이 지원되는데 품목은 학교별로 상이하다.

교복 품목은 각 학교 교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 정해진 품목은 교목업체에 전달돼 현물로 지급된다.

정작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품목을 고를 수 없는 것이다. 필요 품목은 추가 비용을 들여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만큼 무상교복 지원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교복심의위원회에 교육공동체인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어 수요를 맞춘 품목 결정이 쉬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많은 품목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을 구성했다고 해도 실제 학생 개인이 원하는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개별비용은 개별비용대로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학부모 3408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직접 업체를 찾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 지원이 아닌 바우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지원금에 무상교복지원금을 포함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고로사 용인지역 학부모회 회장은 "무상교복 지원금 내에서 체육복을 다량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이미 품목이 정해져 안 입는 재킷을 받았다"며 "체육복을 추가 구매해 지원을 받아도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교복 구매는 강제가 아닌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바우처를 통해 각 가정에 맞는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현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교육활동 법적 지원 약속에도… 체험학습 두려움에 '덜덜'

체험학습 사고 시 고소 빈번히 발생
교원단체 보호책 요청에 교육청 거절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법률 지원 비판
도교육청 "입장 밝히기 어렵다" 회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소당하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도내 교원단체는 '강원도 체험학습 교사 고발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보호시스템 마련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한 교원단체는 체험학습 시 사고가 나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 측은 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안전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민·형사상 고소는 막을 수 없더라도,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교사에게 고소·고발을 자제해달라'는 교육청 차원의 안내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측은 '해당 문구로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의 문제가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 선생님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장교사들은 도교육청이 '보여주기식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 교사 A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니 교사들도 체험학습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인 체험학습을 고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국장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분쟁도 매년 발생 중"이라며 "운영매뉴얼에 고소·고발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넣는 게 설령 요식행위더라도, 교육청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실제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법적책임을 지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례는 빈번하다.

지난 2018년 대구에서는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용변이 급해 버스 안에서 해결하고 귀가의사를 밝혔다. 당시 인솔교사는 학부모와 통화 후 학생을 휴게소에 1시간가량 맡겼으나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유기죄로 고소했다.

또 과거 물놀이 현장체험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점심 식사 후 유수풀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건에 대해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단체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정리 중이다. 아직 공식입장을 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또 협의회 당시 교원단체 요청을 거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는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보현 기자